데스크 시각

메르스는 이겨냈지만…

송 기 동
사회2부장

"보성녹차로 이겨 낸 메르스. 읍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보성읍사무소 직원 일동)

"보성녹차가 청정 보성을 지켜 냈습니다."(보성 차생산자 조합)

요즘 보성읍으로 들어가는 도로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인 격려 플래카드가 여러 개 걸려있다.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보성읍 한 마을이 외부와 12일 동안 통제됐다가 아무 탈 없이 해제된 것을 자축하는 문구이다.

지난 27일 보성 읍내에 자리한 녹차골 보성 향토시장을 찾았다. 원래 2·7일에 열리는 오일장이었으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은 아케이드 등을 갖춘, 현대화된 시장이다. 장날인 이날 장내는 주민들만 오가고 있었다. 유명 녹차밭 주차장 역시 10여 대의 차량만 주차돼 있을 뿐 한산했다.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한 데다 농·특산물 판매마저 부진해 보성 등 전남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이나 경기도 평택과 달리 메르스 감염 우려가 높지 않은데도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마저 기피당했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보성읍 한 마을이 격리된 기간 동안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최근 들었다.

피해 지역 전통시장 한산

벌교 주부 4명이 그동안 꼭 가고 싶었던 완도 청산도 나들이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은 끝내 승선할 수 없었다. 보성에서 왔다는 것을 승선 수속 과정에서 알게 된 선사 측에서 주민들이 배에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확진환자나 자가격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보성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또 한때 모 농산물 공판장에서는 보성에서 생산된 감자 등의 농산물 반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돌았다. 공판장 측은 중간상인들에게 '경매인들이 보성 농산물을 꺼린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현재 보성 지역 확진확자는 완치돼 퇴원했고, 확산 우려 때문에 12일간 격리됐던 마을도 해제돼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는 비단 보성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목포·순천 등 메르스 발생과 전혀 연관이 없는 전남 도내 유명 관광지 역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에 따르면 6월 목포항을 이용한 뱃길 여행객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수준에 그쳤고, 목포역 KTX 이용객은 전월 대비 58%나 급감했다. 중국과 제주 관문으로 떠오른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유커'(중국 관광객)들도 전월보다 70% 이상 감소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메르스 확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메르스 사태가 3개월(6~8월) 이어질 경우 최소 2조5612억 원에서 최대 4조6366억 원의 관광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집단적 '편견' 깨뜨려야

발생 초기 생소했던 메르스는 이후 누구에게나 공포감을 안겼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된 데다 보건당국도 한동안 허둥거렸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다. 단지 병 치료를 위해 문제의 병원을 들렀거나 문병을 갔다 온 것뿐인데 '죄인' 취급을 받았다. 정보 공개를 늦추는 바람에 생성된 괴담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아무리 첨단과학 시대라 해도 '과학'이 대중들의 잘못된 '편견'을 이기지 못했다. 이제 메르스로 인한 편향되고 집단적인 '편견'을 깨야 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스와 메르스 모두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라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인간과 야생동물 간 직접적인 접촉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전파됐다고 한다.

이제 당면한 큰 문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보성군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회천감자 직거래 장터를 여는 등 판매 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시도 순천만정원 등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6월 22일)가 지난 요즘은 감자철이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농부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농·특산물을 재배해 수확했다. 메르스 사태가 아니라면 요즘 같이 가슴속이 타들어 가는 마음고생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전남 도내 농·특산물 사주기, 전통시장 장보기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은펜칼럼

건축=공간+시간+인간=문화유산

박 홍 근
양림플랫폼 대표 건축사

의식주(衣食住)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기본을 뛰어 넘는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옷의 기능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되었고,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넘어 즐기기 위해 먹는 것이 더 많아졌다. 집이란 것도 자신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보호받는 기능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 있다.

각자의 집은 자신에 맞게 구상하고 지어지고 사용되어진다. 집은 '건축물(building)'이고, 일련의 과정을 '건축(architecture)'이라고 한다. 건축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만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장소와 공간을 제공한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건축의 본질을 알려하지 않고, 관심도 미약하다. 건축은 우리네 삶에서 매우 중요한데 일부 부동산으로서 건설(construction)에만 관심을 갖는 데는 아쉬움이 많다.

건축물의 법적 소유권은 개인이나 단체의 것이지만, 소유권을 넘어 공공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건축물은 그저 지어진 채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도시 경관과 풍경을 만들어 삶의 수준을 규정짓고, 도시 이미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건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축은 단지 건축물을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짓기 위해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공하고 나아가 그 건축물이 유지 관리하는 일 전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건축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공유했으면 한다.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장차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닌다. 그 건축물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다.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행정과 국민이 '기본'인'건축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생활 공간적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시회적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 · 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은 여러 과정과 많은 사람들의 1차원적인 노동을 거처 공간으로 태어난다. 그 공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들의 사용을 통해서 천천히 완성되어 간다. 공간·시간·인간들 속에 이야기(story)가 생기면, 건축은 역사(history)가 된다. 건축이 이야기와 함께 할 때 문화유산이 되고, 역사적 자산으로 남게 된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생각해 봐도 그리하지 않는가?

일상의 시작은 나의 공간인 방에서 시작하여, 집, 동네(마을), 도시로 이여진다. 어느 한 순간도 건축물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만든 건축물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다시 그 도시를 닮을 수밖에 없다. 이들 생활의 켜들이 우리네 역사가 되기에 우리가 '건축'의 기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아시아문화전당, 갈아엎을 것인가?

이 병 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메르스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 때문에 온 세상이 또 시끄럽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쏟아낸 막말 때문이다. "…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 운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섬뜩하다. SNS에 만연한 막말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지금 심지어 대통령까지 막말 논쟁의 한가운데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하지만, 그 행사의 방법은 천박하거나 협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부권 행사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자. 세월호참사 이후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정부의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시행령이 특별법의 취지를 축소 왜곡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제시된 대안이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등장해야 하는가? 아시아문화전당은 야당의 몫이란 말인가?

이명박정부에서도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애초의 계획과 대비하여 큰 변화 없이 진행됐다. 그러다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아시아문화전당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당을 운영할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조직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비협조로 벽에 부딪히자 느닷없이 문화관광부에서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국회에서 겨우 원래의 위치에 가깝게 되돌려 놓은 것이 지난 3월이었다. 2년의 세월동안 허송세월을 자초했던 것이다. 그뿐 아니다. 2014년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을 건립하겠다고 박대통령이 발표했던 것이다. 정부의 머릿속에 아시아문화전당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특별법에 근거를 둔 국책사업으로 참여정부 때 시작되어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아시아의 문화자원을 토대로 세계적 문화 예술 트렌드를 발신하고 문화콘텐츠를 창·제작하는 복합문화예술기관이다. 그래서 비록 광주에 소재하지만 문화국가의 터미널이자 창조경제의 수원지인 셈이다. 전당이 문화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창·제작하면 그만큼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전당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면 그만큼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갖게 된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광주에 건설하다 보니 바라보는 눈이 탐탁지 않다. 지역사업으로 폄하하면서 말이다. 그런 인식이 깔려있기에 건설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으나, 전당을 운영할 조직과 인력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했다. 말하자면 문화유람선은 건조됐으나 이를 운영할 선장이나 기관사, 조타수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이 거대한 배를 띄울 수가 없다. 운영주체가 없으니 개관콘텐츠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에도 문화적 상상력이 깔려있는 것이다. 문화와 경제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이다. 광주에 소재한다고 광주만의 것인가. 광주에 소재한다고 야당의 것인가. 전당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시설인가. 그래서 10년 넘어 준비하여 개관을 앞둔 아시아문화전당을 이제 와서 갈아엎을 것인가?

아니라면 발상의 대 전환을 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박근혜정부의 최대 문화치적으로 삼자고,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삼자고 말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장마철 재해 위험 벗어날 날 언제쯤인가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를 뼈저리게 경험한 이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일부 지역은 지난해 피해 현장의 복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니 주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상습 침수 지역의 실태는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광주시 광산구 삼막동 벽파마을은 매년 장마철이면 황룡강 하천 수위가 상승해 농경지와 도로 등이 물에 잠긴다. 현재 몇 년간의 물난리를 치른 후 뒤늦게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도 내년에나 완공된다고 하니 올해는 대책 없이 비 피해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보성군 겸백면 도림마을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마을은 지난해 주택 9가구와 일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상습적인 수해 피해 지역으로 꼽힌다. 때문에 당장 '수해 상습지'로 지정해 배수펌프를 설치해야 함에도 예산(40억 원)이 없다는 이유로 땜질식 조치만 해 놓은 상태다.

지난 2월 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이 무너진 광주시 남구 대화아파트 주민들도 아직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너진 옹벽 66.38m 구간에 대한 응급 복구는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4개 구간(277.4m)은 오는 7월에나 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제2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광주 전남은 자연 위험지구가 91개소, 산사태 취약지구가 1216개소에 이르는 등 잠재적 수해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수해를 막을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산 운용의 묘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지만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로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메르스 진정세…방심 말고 교훈 되새겨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불안감에서 이제 벗어날 때도 된 것인가. 일상을 짓눌렀던 메르스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추가 확진자도 어제까지 사흘째 발생하지 않았다. 퇴원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95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조심스럽게 메르스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민들도 활기를 되찾으면서 지난 주말에는 나들이도 늘었다. 백화점이나 경기장 등에는 예년처럼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메르스 발병 이후 외출을 자제하던 시민들이 서서히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나친 공포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이 얼마나 컸던가. 따라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메르스 진정세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욱 다행스럽다.

사실 메르스는 바이러스 자체의 위험성도 문제였지만 사회적 불신이라는 보다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감염 경로, 방역과정의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사이에 갈등이 속출했다. 물론 소비위축과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인 피해도 막심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메르스 출구 전략을 짜야 할 때다. 물론 메르스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끝까지 메르스 청정지역 광주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르스 방역과 관리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치밀한 방역 대책을 펴는 한편 시민들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모두들 차분히 과거를 돌아보고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면회와 응급실 출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무분별한 병문안과 보호자 체류 등 그동안의 잘못된 병실문화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정치만큼 인물을 중심으로 세(勢)를 형성하는 곳도 없다. 지도자를 축으로 파벌을 형성하다 보니 '계파 정치'라는 말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정치권은 당권을 누가 잡느냐를 놓고 계파 간 치열한 경쟁을 해 왔다. 당권을 갖는 쪽이 국회의원의 공천권은 물론 대권 후보를 내왔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계파 정치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 시절이다. 노태우의 민정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김영삼의 민주당이 합쳐지면서 민정계·공화계·민주계가 치열한 경쟁을 했다.

계파 정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주류인 '친이'(친 이회창, 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이란 말이 등장했다. 비주류로 있다 당권을 잡으면서 주류로 등장하는 방식이다. 친박이 대표적으로, 친박계는 한나라당 시절에는 이회창·이명박계에 밀려 비주류에 속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주류로 떠올라 새누리당으로 개명했다.

야권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DJ(김대중)의 동교동계와 YS(김영삼)의 상도동계라는 양대 계파로 나뉘었다. 3당 합당으로 상도동계가 여권의 민주계로 분파하면서 동교동계가 한동안 주류를 형성했지만 노무현의 등장으로 '친노'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후 다수의 지도부 교체를 비롯한 분열로 친노계, 옛 민주계, 정세균계, 손학규계, 김근태계, 김한길계, 안철수계 등의 계파로 쪼개졌다.

지난해 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연합의 자체 성향 분석 자료에도 계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26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친노가 55명이었고 이중 문재인 계파가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71명을 비노(非盧)로 분류했는데 손학규계(15명), 김한길계(12명), 민평련(8명), 박지원계(7명) 순이었다.

새정치연합이 최재성 사무총장 선임으로 분열 양상을 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문제를 놓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년 전 삼고초려를 하면서까지 자신(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던 유승민을 이번에는 배신자로 낙인찍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권력 앞에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이 실감 난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